

삶정치(biopolitics)의 관점에서 본 이른바 '과거청산' 운동

조정환 (갈무리공동대표)

‘한국 군부권위주의정권 하에서의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및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과거청산의 동학’에 대한 토론

1. 김대중 정부 수립 이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억압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부정적 방식으로 전개되었던 이른바 ‘과거청산’이 긍정적 방식으로, 다시 말해 피억압자의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 그들의 명예회복과 희생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들의 투쟁에 대한 기념과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인권차원에서의 예방조치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조희연 교수가 발제문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네 가지 법안(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99. 12. 28,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999. 12. 28,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 4. 30,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2001. 6. 28)의 입법과 시행에 잘 나타나고 있다.
2. 조희연 교수가 이론적 수준과 역사적 수준, 그리고 실증적 수준 모두에 걸쳐 밝히고 있듯이 이 법안들의 입법과 시행의 과정은 비록 국가를 무대로 전개되고 있지만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복수적 힘들의 상충과 타협, 그리고 조절의 과정에서 나타났다. 조희연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과거청산의 공간은 “구지배블력의 구성원들과 분파들의 ‘전략적’ 행위들과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반구체제 세력의 저항행위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분명히 그 공간에는 1995년에 전개된 광주학살자 처벌투쟁에서 국민의 정부 하에서 전개된 유가족들의 400여일에 걸친 농성투쟁에 이르는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지배



를 쇄신하려는 세력의 갈등과 알력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3. 이 공간에서의 운동은 시민단체(가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올바른 국가인권 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등)가 발의, 청원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입당하여 국회나 각종 국가기구에 진출한 민주화 개혁세력이 입법, 시행에 앞장섬으로써 위로부터의 보수적 힘과의 사이에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과거청산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사회진보를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유력한 노선으로 자리잡아 가는 듯하다.
4. 우리는 이 운동의 성과에 대해 눈감을 수 없다. 이 운동을 통해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 특히 폭력적 억압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보안관찰법 등에 기대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기관들(중앙정보부-안기부-국정원, 보안사, 검찰, 교도소 등)의 범죄가 이 운동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 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거의 뒤따르지 않고 있는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면서도 '과거청산' 공간의 현재적 한계로 받아들여진다.) 현재까지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인정된 사건에만도 박영두 사건에 국군보안대-삼청교육대-청송교도소가, 한희철 사건에 보안사가, 임기윤 사건에 보안사가, 김준배 사건에 전남지방경찰청이, 최종길 사건에 구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민청학련, 미 문화원 점거, 삼민투 사건, 동의대 사건 등 일부의 학생운동과, 전교조 및 해직 언론인 등 지식노동자들의 운동, 그리고 전태일과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 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여 그 명예를 회복하는 등 학생, 노동자, 지식인의 운동에 채워진 반공주의적 족쇄를 풀어내었다.
6.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나는 동의대 학생들의 투쟁이 심의위원회가 말하는 민주화, 즉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이라는 정의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한국 근대사에서 있어온 운동들의 더 많은 부분들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2년의 시간을 통해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되어온 것들은 실제로는 민주화운동을 빙산에 비유할 때 그 얼음조각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민주화 정의는 내가 보기에 시간한정('1969년 8월 7일 이후'), 반민주세력 설정('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 활동의 목적 설정('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 그리고 주체 개념 정의의 부재에서 중요한 제한과 결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중의 자유와 자율을 생산하는 다중 자신의 일체의 활동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의로 민주화의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주화 개념에서 보면 심의위원회에 신청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들이 있을 것이며 기각된 것 중에도 그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중 자신의 운동'이 아닌 것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럴 때 심의위원회는 항상 다중을 대의하려는 다양한 세력들의 정파투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7. 확실히 문부식씨가 지적하듯이 동의대 사건에는 다른 경우와는 달리 7명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인명의 상실이 있다. 이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명은 인류적 부의 고귀한 형태이며 특히 경찰관들은 그들이 떠맡은 억압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복을 입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권위에 짓눌려 명령에 복종하는 탄압기계로서 움직일 때에도 그들은 바로 그 명령권위에 저항할 잠재력을 담지하고 있는 주체들이다. 역사는 투쟁이 높은 덕성에 의해 움직일 때 경찰들을 저항의 편으로 흡인하는 힘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사실을 적지 않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임을 승인하면서도 그것이 '덜 폭력적일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문부식씨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숙고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8. 납치와 감금,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고문은 그것이 프락치로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국가테러



가 지금까지 인류에게 보여온 가장 더럽고 능욕적인 모습,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지난 날 우리의 민주적 운동 속에 이러한 테러적 수단들에 대한 유혹과 그것의 모방적 행사가 때로 있어 왔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은 다 중의 자율을 생산하기보다 그것을 침식한다.

9. 근본적 문제는 목적과 수단의 분리이다. 우리는 인간해방을 위해서 권력장악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이 믿음은 권력장악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수반하는데 그것은 권력 자체가 인간해방과는 '오래' 양립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수반한다.) 이 믿음은 나아가 권력장악이라는 단기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해방과 배치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허락하게 된다. 실제로 단기적 목적 달성(즉 승리)이 비인간적 수단들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는 허다했다. 그러할 때 그 권력이 인간해방으로 가는 다리가 되기보다 인간해방을 저지하고 봉쇄하는 기제로 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보편이었는데 역사적 사회주의들은 그것의 한 사례이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은 목적과 수단의 이러한 분리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조직된 폭력, 즉 타율 권력으로서의 국가권력을 장악해 인류의 자율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해방은 오직 그에 상응하는 수단,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는 수단들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은 국가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이 세계를 바꿀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원천이면서도 그것의 대상이 되어 있는 활력을 만회하고 그것의 삶정치적 능력, 윤리정치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그렇다면 지금 국가권력 속에서 국가권력의 변형을 목표로 국가적 수단들(대표적으로 법률)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 운동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과거청산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과거는 현재 혹은 미래와 분리 불가능한 것이며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현재이자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권위주의 통치'의 청산이며 그렇게 불러져야 마땅하다. 둘째 국가권력에 대한 압력과 운동의 국가화는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에 압력을 가하여 국가로 하여금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것은 국가를 해체시키고 사멸시키면서 다중의 삶의 자유와 자율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반면 운동의 국가화는 운동이 국가의 규율에 동

화되고 통합되며 활동가가 국가의 직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운동을 경직시키고 물신화시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것의 활력을 침식한다. 지금의 '과거청산' 운동에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변증법적 메커니즘 속에 삽입되어 있다. 마치 신도들의 예배가 신을 생산하고 노동자의 노동이 자본을 생산하듯이 다중의 운동이 국가의 권위를 생산하고 있다.

11.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이 변증법적 과정의 모순이며 우리가 깨뜨려야 할 것은 이 변증법 자체이다. 나는 조희연 교수의 생각에서 이 변증법에 대한 긍정을 읽는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경제위기가 정치위기가 도래하면 언제든지 쉽게 내던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어느 정치사회집단도 준수하여야 할 '불가역적인' 기본선이 되도록 하여 모든 사회적 행위가 민주주의 규칙 속에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민주주의를 역사화하고 국가화하는 목적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현시기 운동의 최대치는 아닌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다중의 삶이 국가라는 환상적 공동체 속에 투영되고 그것을 통해 대의되는 것이 역사 발전의 어떤 불가피한 단계라는 진화론적 진보관을 표현한다. 이 관점은 현재의 대의 메커니즘과 그 변증법, 국가의 종합능력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국가화되고(국가state란 정지stand를 의미하는 라틴어staus에서 나왔다), 우리의 운동이 국가화되고, 우리의 사유가 국가화되는 것, 그래서 국가가 거역하기 힘든 물신으로 권능을 부여받는 반면 우리의 자율이 정지되는 과정의 반복에 이 진화론적 진보관이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2. 이것은 국가가 운동의 모든 요소들, 그 자율의 요구들 일체를 정지시키고 그와는 반대의 행동만을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반혁명 은 실제로는 위로부터 진행되는 혁명이다. 그것은 혁명의 요구들을 실현하지만 혁명의 죽음을 가져오는 방향에서만, 즉 파편적으로만 실현한다. 민주화 운동의 요구들은 실현된다. 의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가 회복되며 보상이 이루어지고 기념비가 세워진다. 과거가 청산되며 민주화 운동세력이 권력에 접근한다.
13.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 수준에서 진행되는 이 과거청산의 이면이다. 전과 다름없이 학생이 체포되며 시민이 경찰에 구타당할 뿐만 아니라 전과는 달리 노동자가 직장에서 정리되고 자본은 우리 삶의 모든 부면을 점



령한다. 조희연 교수는 87년 이후의 과거청산이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청산의 정치적 공간에 '신체제의 성격이 구조적 선택성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 말은 김대중 정부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화가 '신자유주의적' 민주화임을 말하는 셈이다. 그것의 핵심은 다중의 삶의 확장에 있다기보다 민주주의와 관련한 국가의 자기의식의 변화에 있다. 대중에 대해 억압적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따라 지배하는 것이 착취의 신자유주의적 실행에 더 유리하다는 쪽으로의 자기의식의 수정! 그러나 조희연 교수에게서 신체제의 구조적 선택성, 혹은 새로운 국가의 주관적 의지는 87년 이후 민주화의 '거시적 한계'라는 범주 속에 객관화되어 버리고 국가는 여러 세력이 갈등하는 중립적 공간으로만 평가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희연 교수의 주장대로 국가는 '계급적·사회적 세력관계의 반영이자 응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바로 그 응축과 대의를 통해서 다중을 대상화하면서 착취와 지배를 재생산하는 정치적 기계이다.

14. 명백히 오늘날의 과거청산은 권위주의 통치의 부분적 약화라는 긍정적 성과 뒤에서 오늘날의 정부와 그것의(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권위주의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에게 권위주의 인가 신자유주의인가를 선택하도록 명령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민주화와 복지화의 요소를 수반하는 것은 민주화, 복지화의 회수를 수반하는 서구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상황 전개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한국 신자유주의 정치의 민주와 복지 차원에서의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과소 민주와 과소 복지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맞추어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조정되어 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5. 문제는 국가의 수준에서 전개되는 운동 요소의 파편적 실현들을 우리의 것으로 재전유하면서 운동을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것으로 되살릴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이 거대한 문제 자체를 이 자리에서 온전히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권위주의적 과거의 청산 운동과 관련해서 그것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신체제, 신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의지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주화를 공적 질서화(public ordination)로부터 공동적 협동활동

(common coordination)으로 역전시키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다중사회 차원에서 국가화를 넘어서고자하는 독립된 힘들이 축적되고 유통될 필요가 있다. 이 힘들이 국가의 어떤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국가에의 참여사업으로서보다는 유기화된 다중들에 의한 파견사업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컨대 민주화의 개념 설정과 그 적용에서 다중의 자유와 자율을 구속하는 입법, 집행 등의 경우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그 부당성을 폭로하며 필요한 경우 사퇴함으로써 다중의 자율성을 넓히고 국가의 행동반경을 좁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예컨대 영화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한 심의위원 일부의 사퇴항의를 참조해 보자.)

16. 마지막으로 조희연 교수에 의해 “미래는 올바른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명제로 표현된 기억화의 문제에 대해, 이것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의 기본 사상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기억을 다루는 것은 다중 자신보다는 다중으로부터 나왔으나 그와는 일정하게 분리된 지식인들의 업무였다. 그리고 그 성과는 국가의 수중에 축장되었다. 국가는 기억을 통제함으로써 다중을 통제하곤 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도 기억을 발판으로 도약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기억은 시간의 특수한 활동성이다. 그것은 시간에서의 전진이 아니라 후퇴를 함축한다. 시간 속에서 특정한 순간의 고립, 그 고립된 시간의 계기들의 축적이 기억이다. 삶은 자신 내부에 기억을 갖지만 활력적 욕구가 그 기억을 제어하고 스스로 기억을 넘어서는 지성으로 활동할 때(즉 ‘다중 지성’)에는 삶은 기억에 지배되지 않고 흐를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이 삶의 출발점이자 동력으로 될 때 삶은 기억에 사로잡히고 고정화되며 파편화된다. 여기에서 시간의 충만한 총체성은 억눌린다. 이 기억의 지배를 뚫고 솟아오르는 것은 다중의 활력, 산 노동, 생동적 욕구이다. 기억의 공장인 현실 사회주의를 부순 것은 기억 없는, 이데올로기 없는 커뮤니티즘이었다. 기억의 거부 속에서 생동적 공동체가 엑소더스의 형태로 구축되었다. 만약 지금도 ‘기억 투쟁’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헤게모니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기억에 대항하며 기억을 넘어서는, 그래서 ‘기념’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결과 삶의 존재론적 지평 속에 합류하여 시간의 충만한 총체성으로 살아나는



지성적 활력의 운동일 때 후퇴와 정지에서 벗어나 삶의 흐름으로 역동할 수 있다.
150년 전에 맑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9세기의 사회혁명은 과거로부터가 아니라 오로지 미래에서 영감을 받는다.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미신을 벗어버리고서야 비로소 19세기의 사회혁명은 시작될 수 있다. 이전의 여러 혁명은 자신의 혁명적 내용에 눈을 감기 위하여 지나가 버린 세계사의 추억을 필요로 했다. 19세기의 혁명은 그 자체의 독특한 내용을 얻기 위하여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신을 묻어버리도록 하여야만 한다. 과거의 혁명에서는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였다. 19세기의 혁명에서는 내용이 형식을 압도한다.”(『프랑스 혁명사 3부작』, [루이 보나파르트프의 브뤼메르 18일], 149)

안타깝게도 우리는 21세기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또 다시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다. 21세기 운동이 독특한 내용을 얻기 위해서는 20세기 운동에 대한 추억은 필요치 않다고. 계속되어야 할 것은 기억보다는 꿈이라고.